

여야 '개헌·의장단 선출' 놓고 다시 강경 대치

야권 정부안 철회 한목소리... 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민주당 "국회법 규정따라 오늘 국회의장 선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 24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명분으로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하고 있으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

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불꽃을 터뜨리기를 요청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24일 본회의의 개여부는 불투명하다. 헌법 130조에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는 민주당(118명) 참석만으로도 열수 있지만, 의결정족수(192명)는 채울 수 없다. 이 경우 표결 절차를 밟아도 명패 확인을 거쳐 의결정족수 미달이 확인되면 이른바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다.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면 이 안건은 계류이든, 자동 폐기이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효적 의미가 사라진다. '60일 이내 개헌안 의결'이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두고 표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당장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24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28일 본회의 등 향후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의 '자진 철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몇 차례 말했지만, (개헌안 철회)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며 국회의 몫"이라며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원내 1당으로서 이미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해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다수당이라고 국회의장을 자동으로 맡으려 법은 없다"며 관련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시장·군수·시의원 후보

전덕영 "선거로 일당 독점 청산... 광주 바꿀 것"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공천을 받은 전덕영 전남대학교수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교수는 "수십 년간 일당이 지방권력을 독점하면서 광주·전남 정치는 이권 다름·부정부패로 얼룩져 시민의 자긍심도 짓밟혔다"며 "선거를 통해 일당독점을 청산해 광주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일차리와 미래산업 창출로 광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잘못된 지방정치로 광주공동체는 분열됐다"며 "풍요롭고 행복한 광주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식 "시민의견 수렴... 시민 청원제 운영"



김종식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시민들의 의의와 참여가 주도하는 시장 운영을 위해 시민청원제 등 소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대한 건의사항이 개인이나 이익단체의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익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청원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절감을 위한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외부인사 청탁 배격, 인사 청탁 공무원 명단공개 등 인사 불이익, 기업유치·공모사업선정·행정실적평가 수상자 평점 우대 특별승진, 공사·계약·납품 부정부패 근절, 부정 사업자의 모든 공사 참여를 배제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해야"



박홍률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목포관광산업업체 융자 지원 100억원 등 목표에 약 300억원의 예산지원이 확정됐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도 함께 추진해 왔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목포시가 지정되면 기업에 금융 및 재정지원, 연구개발 활동지원과 기업의 판로 지원, 실직자퇴직자의 고용 안정지원, 산업기반시설 및 투자유치 등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응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진태 "광산구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정진태 바른미래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광산 제1선거구)는 23일 "광산구는 도농복합도시이면서 교육환경의 편차가 크다"면서 "광산구 새마을회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는 일에 팔 걷고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도산초, 송광중 운영위원장과 홀리트리교육지원센터 활동하면서 지역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광산구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역사회가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당당한 광주, 따뜻한 광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미래가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전통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목포=고규석 기자 kroh@kwangju.co.kr



안- 卍 반가운 인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孫 "선거 안 나간다"

바른미래 송파를 공천

유승민-안철수 갈등 계속

바른미래당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서울 송파를 국회의원 재선거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 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내가 박주선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손학규 전략공천을 접으라'고 벌써 이야기했다"며 "당이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원래 출마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면서 "송파를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한 박종진 예비후보에게 두 번이나 전화해 '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 최고위는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해야 한다는 유승민 공동대표와 손 위원장을 전략공천 해야 한다는 안 후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천 결정을 미룬 채 대립하는 상황이다.

예초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송파를 재선거 후보 공천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냉랭한 분위기 속에 회의를 진행하다 결론 없이 끝났다. 후보자 등록이 24~25일로 예정된 만큼 더 이상 공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 후보 측과 유 대표 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40여분 동안 돌아가면서 공개 모두발언을 했지만, 정작 최대 관심사인 송파를 공천과 관련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회의로 들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중점법안 목록 교환...이달 중 처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드루킹 방지법 등

여야는 23일 5월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가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무자 간 협의를 하고 중점법안 목록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필두로 모두 13개 법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을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 범위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을 부각했다. 한국당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17개 법안을 드루킹 방지법으로 추렸고, 바른미래당도 댓글조작 방지가 핵심인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을 중점법안으로 내놨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소외계층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법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청년고용법을 양대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비리사학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이 핵심인 사립학교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가임대차법, 경제민주화 상법 등도 평화와 정의의 중점법안 목록에 올랐다. 여야는 24일 오전 10시 민생입법협의체 회의를 하고 주고받은 중점법안 목록을 토대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빼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